



# 보도자료

2009.10.6(화)

국 회 의 원

김 영 우

(포천시 · 연천군)

(우) 487-800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28-8호 3층 Tel:031-533-0700 / Fax:031-533-0791  
 (우)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206호 Tel:02-784-1521 / Fax:02-788-3206

## 김영우 의원, 10월 6일(화) 국방부 국정감사 질의 요지

- 임진강참사를 계기로 완벽한 민·관·군 합동경계시스템을 구축 필요
-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 사고예방과 협력을 위해 남북공동 '접경지역공동관리위원회'구성 필요
- 지뢰로 인한 민간인 피해 보상 문제와 민통선이남지역 지뢰제거 필요
- 군인 복무중인 지역 지방교부세 현실화 방안 필요
- 반환 된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문제 해결 방안 필요
- 군 사격장 주변지역 오염 현황파악과 오염 문제 해결 방안 필요
- 중고아과치 도입에 차질이 생겼다면 한국형공격헬기사업 서둘러야

### <임진강참사를 계기로 완벽한 민·관·군 합동경계시스템을 구축해야>

- o 지난 9월 6일 발생한 임진강참사의 1차적 책임은 사전통보없이 4천만톤의 물을 일시 방류한 북한측에 있지만, 임진강수위가 급격히 불어나는데도 관련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군도 이번 참사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 o 임진강참사가 터지기 전에 연천군과 수자원공사는 세 차례에 걸쳐 '북측댐의 수문방류가 관측될 경우 신속한 유선통보'를 요청하는 취지의 협조공문을 해당 군부대에 보냈음.
- o 수공은 지난해 4월 25일과 올해 7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 '군남홍수조절지 건설사업 관련 협조요청'이란 제목의 협조공문을 보냈음.

※ 수공협조 공문 내용 : “북측댐의 운영에 따라 군남홍수조절지 및 임진강 하류부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귀부대에서 북한댐(4월 5일댐)의 수문 개폐가 관측될 경우 불임 비상연락망으로 신속한 유선 통보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o 또한 연천군도 지난해 6월 11일 같은 부대에 '재난관련 유관단체 연락체계 구축 및 필승교수위 관련 협조요청'이란 제목의 협조공문을 보냈음.

※ 연천군 협조공문 내용 : “△△사단 경계지역인 중면 횡산리 필승교에 설치된 자동우량경보시스템의 낙뢰피해 등 예상치 못한 장비고장에 대비 임진강 지구 하류주민 및 행락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우리군 상황연락번호를 알려드리오니... △△사단에서는 필승교 임진강 수위 상승시 연천군 당직실 및 재난상황실로 즉시 통보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o 하지만 해당 군부대는 연천군과 수공의 이러한 협조 요청에 아무런 회신도 하지 않았음.
- o 이번 참사를 계기로 우리 군은 접경지역에서 북한의 비군사적 도발에 대한 완벽한 민·관·군 합동경계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o 이번 참사를 계기로 북한의 수공이나 접경지역에서의 재해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앞으로 UFG(울지프리덤가디언) 연습에서 이러한 위기상황을 가정하여 연습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함.

### <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인 사고예방과 협력을 위해 남북공동으로 '접경지역공동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

- o 독일의 경우에는 통일 전, 동·서독 접경지역에서의 자연재해예방, 수자원 관리, 환경오염예방 등을 위해 '국경위원회(Grenzkommision)'를 만들어 동서독이 공동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음.
- o 우리의 경우에도 접경지역에서 수해나 환경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 남북이 함께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접경지역공동관리위원회'같은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o '접경지역공동관리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정보교류가 활성화됨에 따라 접경지역에서의 재해재난과 우발적인 사고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며, 남북간 신뢰구축에도 큰 기여를 할 것임.

## < 지뢰로 인한 피해와 민통선이남지역 지뢰제거의 시급성 >

- 국내 지뢰 매설 현황 : 1,100여개소 약: 860,000개
  - DMZ 내 지뢰 현황 : 500여개소 약 400,000개
  - DMZ 외 지뢰 현황 : 200여개소 약 900,000개

- 미확인 지뢰지대는 200여개소, 매설발수는 확인 불가

- 최근 10년간 지뢰로 인한 민간인 피해 현황
  - 사망5명, 부상 27명, 굴삭기 및 트랙터 파손: 4건

※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현황파악이 되지 않은 사례가 더 많음.

※ 2009년 4월 25일 연천 중면 지뢰사고로 1명 사망  
2009년 9월 19일 연천 전곡 지뢰사고로 1명 부상 및 굴삭기 파손

- 민통선 이북지역은 지뢰제거를 한적이 없으며 현재 민통선 이남만 지뢰 제거 중. 2013년까지 민통선 이남 지뢰제거 계획중.
- 현재 우리 법원은 최근 발생하는 민간인의 지뢰피해 사고와 관련해 군이 위험방지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국가배상 책임을 대부분 인정하고 보상을 해주고 있음.
- 그러나 6.25전쟁이후 지금까지 민통선 근처에서 생활하며 지뢰피해를 입었던 주민 대부분은 무지로 인해 국가배상법(1964년 시행)이 있는 사실조차 몰랐으며, 그당시 안보상황이나 시대 특성상 강압적인 군에 배상을 요구할 수조차 없었음.

### =====동영상 상영(2분20초)=====

- 대부분의 지뢰 피해자들은 과거 국가배상법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거나 관할부대로부터 불이익을 받을까봐 군에 알리거나 정부를 상대로 적법한 배상 신청을 하지 못하였음.
- 특히, 이들은 자신의 논에서 영농활동을하거나 심지어 군의 일을 도와주기 위하여 동원되어 일하러 갔다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치료뿐만 아니라 한 톨의 보상도 받지 못하였음.

※ 군에서는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현황도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고 있음.

- 민통선 주변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은 영농활동을 하기위해 민통선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군이 요구한 각서에 서명을 해야함.
- 이 각서에 8항에 의하면 “영농작업(개간작업)으로 인해 제반 야기되는 각종 사고(부상, 사망)의 책임은 본인이 진다”라고 되어있음.
- 이러한 각서는 법률적인 효력이 없는 것임.
- 이 시절에는 지뢰지역 표시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을뿐만아니라 수해로 지뢰가 유실되어 자신의 논에서 지뢰사고를 당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각서 때문에 군에 얘기할 수 없었다고 함.
- 우리나라는 외국의 지뢰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UN지뢰 신탁기금에 약40억원 이상을 지원하였으나 국내의 민간인 지뢰피해자들을 위해 치료비나 의족 등 인도적 지원을 한적이 없음.
- 국내 지뢰 매설 현황을 보면 1100여개 지역에 면적만 2000만여㎡에 달함. 또한 미확인 지뢰지역도 200여개소에 147만여㎡이며, 매설 지뢰의 수량도 파악이 안되어 있음.
- 지뢰매설지역 중 경남 양산이나 충남 대천 등의 지역이나 경기북부 중 민통선이남 지역의 경우 이런 지뢰가 빨리 제거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본 위원은 이번에 민간인 지뢰 피해자 현황을 조사하면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인 지뢰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함께 준비하였음. 이번에 마련한 법안은 국방부 법무관실과 함께 만들었던 법안으로 지난 16, 17대에 발의되었던 법안을 바탕으로 국방그동안 국방위원회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 들을 보완하였음. 여기계신 국방위원님들과 국방부장관님께서 이 법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 군인 복무중인 지역 지방교부세 현실화 방안 필요 >

- 지방교부세에는 자치단체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지리적·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사유가 인정될 때 ‘보정 수요’라는 개념으로 지방교부세를 추가로 지원해주는 보정제도가 있음.

※ ‘보정인구’는 군인, 전·의경, 의무소방대원 및 재소자 등 주민등록을 하지 않으면서 지역에 상주하는 지역주민과 유사한 인구

- ‘보정인구’에 대한 재정지원은 2007년부터 시작되었음.

### <보정인구에 대한 교부세 세항목 현황>

구분	측정항목	산출기준	현재 반영중인 보정수요
일반행정비	인건비	공무원수	
	일반관리비	인구수	
	안전관리비	인구수	
문화 환경비	문화관광비	인구수	
	환경보호비	가구수	보정인구1 유동인구
	보건비	인구수	
사회복지비	기초생활보장비	수급권자수	
	노인복지비	노령인구수	
	영유아·청소년 복지비	해당인구수	
	장애인 복지비	등록장애인수	
	일반사회 복지비	인구수	
경제개발비	농림수산비	농수산업 종사자수	
	지역경제비	사업체 종사자수	보정인구1 보정인구3
	도로개량비	미개량도로 면적	
	도로교통비	자동차 대수	보정인구2 유동인구
	지역개발비	행정구역 면적	보정인구1 보정인구3

※ 보정인구1 : 군인, 전·의경, 의무소방대원, 경비교도원, 재소자 등

보정인구2 : 군인

보정인구3 : 최근 4년간 평균인구수-기준시점의 과거 최근6개월 평균인구

유동인구 : 유인인구-유출인구 (쓰레기·오폐수 등 환경수요와 교통 혼잡에 따른 수요를 도로교통비 항목에 반영)

- 국가안보의 가치나 중요성에 비추어 군부대나 군사시설이 주민으로부터 기피시설이나 혐오시설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임.

- 현재 경기북부나 강원지역에는 많은 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음. 그리고 이들 지역의 대부분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해당함.

- 이런 지자체에 있는 대부분의 군인들은 주소지만 등록이 안되어 있을 뿐이지 일반주민들과 함께 그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음.

- 현재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군인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아닌 ‘보정인구’라 하여 교부세 세항목중 4개항목만 적용하고 있음.

※ 4개항목 : 환경보호비, 지역경제비, 도로교통비, 지역개발비

- 주민1인당 지방교부세는 평균 100만원 수준인데 비하여 군인은 보정인구로 평가하여 23만원 정도에 불과함. 그나마 60%(14만원정도)만 기초단체에 배정되고 40%는 광역단체로 배정됨.

- 지역규형을 위해서는 보정인구에 대한 교부세 비율을 올리고 세항목에 일반관리비, 도로개량비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함.

- 국방부는 전력증강 예산이나 운영유지 예산 확보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이처럼 민군관계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예산은 소홀히 하고 있음.

- 군부대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이 겪고있는 정신적·경제적·환경적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도 교부세가 현실화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국방부도 민군 상생방안을 위해 지방교부세 현실화에 대한 부분을 행안부와 기재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함.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

## < 반환 된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문제 해결 필요 >

○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 발견사항 및 치유비용 등 진행 현황

반환완료 기지 (40개소)				미 반환기지 (40개소)			
非 오염기지 (18개소)		오염기지 (22개소)		미군 철수기진 (13개소)		미군 주둔기지 (27개소)	
군 활용 (4개소)	관리한 등 (14개소)	군 활용, 관리한 등 (6개소)	지자체 매각(16개소)	환경조사 완료	환경 위해성평가 진행 (1개소)		
				非 오염 (2개소)	오염 (10개소)		
24개소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업무			처분대상 16개소 이전사업단 업무	40개소 환경부 업무(SOFA 환경분과위원회)			

○ 총 80개 미군기지 중 52개 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 완료

구분	총계	조 사 완 료							미조사
		소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대상	80	52	2	15	14	14	5	2	28
조사기관		환경관리공단 / 한국농어촌공사							

※ 52개 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 결과 32개 기지 오염 확인

○ 지자체 매각하는 16개 기지 환경치유비용 : 약 1,907억원

### <반환된 미군기지 환경오염 추가 조사 현황>

기지명	오염성분	토양오염량(㎡)		증감률
		기존조사	추가조사	
캠프 자이언트 (파주)	유류	25,071	41,591	65.9%
	중금속	-	129	-
캠프 홀링워터 (의정부)	유류	9,523	25,408	172%
	중금속	6,925	8,031	15.9%
캠프 스탠턴 (파주)	유류	29,631	50,240	69.6%
	중금속	-	486	-
매향리사격장 육지 (화성)	유류	2,340	6,288	168%
	중금속	150	140	-6.7%
:	:	:	:	:
합계(15개 기지)		599,849	761,590	26%

○ 주한미군기지 반환 협상 당시(2005년~2006년) 정부(환경부)는 16개 미군기지 환경정화비용이 1,197억원이 될 것이라고 밝힘.

○ 이 자료를 바탕으로 국방부는 16개 기지에 대한 환경오염정화 사업추정비를 1,907억원(폐기물처리비용 710억원 포함)으로 책정했음.

○ 2007년 23개 미군기지가 반환되었으며, 이중 16개 기지는 지자체에 매각하기로 결정함.

○ 2007년 11월, 국방부가 정화사업 설명회에서 모든 미군기지에 대한 정화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음.

○ 현재 진행중인 16개 기지의 오염정화 사업은 대부분 최초 오염조사후 3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으며, 정화계획이 발표된 이후 또 2년의 시간이 지났음.

○ 이렇게 사업이 지연된 이유는 정화사업비용 문제로 국방부와 정화사업기관간의 문제가 발생했었기 때문임.

○ 문제는 이런 여러 가지 갈등으로 정화가 지연되는 사이 오염양이 크게 확대되었다는 것임.

○ 2008년 11월, 정화사업 수탁기관인 한국농촌공사와 환경관리공단에서 다시 실시설계를 한 결과 오염 면적이 기존 조사결과보다 평균 26%정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것이 사실인가?

○ 캠프 자이언트(파주)의 경우 기존조사결과보다 65.9%(25,071㎡ → 41,598㎡)나 토양오염이 증가하였으며, 매향리사격장(육지)의 경우 168%(2,340㎡ → 6,288㎡), 캠프 홀링워터(의정부)의 경우 172%(9,523㎡ → 25,408㎡)나 증가하였음.

○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방부에 환경오염정화 사업 추정비는 여전히 1,907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음.

○ 정화비용 증가가 확실하게 됨에 따라 정화사업을 맡게된 기관에서는 사업추정비(1,907억원)에 맞춰 환경정화를 하게 되었는데 환경정화에 문제가 없는것인가?

## < 군 사격장 주변지역 오염문제 해결 마련 필요 >

- 국방부는 오염범위가 26%이상이나 확산됐는데도 최초 사업추진비에 맞춰 정화사업을 한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발상임. 지금이라도 오염된 토양을 제대로 정화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늘려야 오염정화사업을 제대로 해야함.
- 2007년 11월, 국방부가 정화 사업 설명회에서 모든 미군기지에 대한 정화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지만, 오염 정화비용이 늘어난 것이 확인되면서 캠프 자이언트(파주)의 정화 책임을 지자체에 넘겼음.
- ※ 징발 해제와 정화에 관한 법률 충돌로 경기도와 국방부는 서로 정화 책임을 넘기려고 하고 있음.
- 반환된 미군기지는 환경정화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기지말고 국방부가 자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함.
- 이렇게 책임공방 때문에 정화작업이 지연되어 오염 범위가 확산 되는 등 치유 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 미군기지는 환경오염 정화 후 매각하게 되며 이 매각대금으로 평택기지 이전등 기지이전 사업 재원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정화가 늦어지면 미군기지 이전 사업도 지체될 것임.

- 군은 특성상 부대관리 및 전투력 유지를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오염물질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둔지 운영과 사격 훈련 등으로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발생 가능성이 높음
- 군부대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물질은 휘발유, 경유, 솔벤트 등의 유류와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납과 구리 등 중금속류와 화학물질 등임.
- 특히, 사격장에서는 TNT, RDX, HMX 등과 같은 화약류 오염물질이 발생함.
- 미국의 경우 TNT와 RDX는 C급 발암물질일 뿐 아니라 환경오염 정화 대상 물질로 분류되어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러한 물질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없음.
- 따라서 국내에 있는 1200여개의 사격장 및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지하수 환경오염 등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임.
- 군부대에서 발생하는 유류, 중금속 오염은 발암, 신경장애, 조혈기능장애, 소화기관 영향 등 신체건강과 자연환경에 피해를 발생시킴.
- 지난 5월20일 SBS뉴스 추적팀은 '보령 암마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충남 보령의 공군사격장 환경오염에 대한 뉴스를 내 보냈음. 그리고 7월 29일에는 '사선에 선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여주지역 군 사격장 피해에 대한 뉴스를 내 보냈음.
- 이 뉴스를 보면 두 사격장의 인근 주민들의 발암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현재 민간 단체에서 역학조사중임)
- 우리 군은 지난 2002년 '사격장 토양오염조사 및 오염확산 방지대책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음. 그 결과 주변지역이 특별히 오염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었는데 이때 보령사격장이나 여주사격장은 포함이 안됐었던 것인가? 아님 조사가 잘못되었던 것인가?

※ 군은 방송이후 긴급히 바닷속 해양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7월부터 탄두수거를 시작, 2010년까지 회수할 계획이라 밝힘.

- 연천에는 북한의 땀방류에 대비해 군남홍수조절지를 만들고 있음. 이곳 바로 옆에는 사격장(마방사격장)이 있는데 비가 오거나 땀이 만수위가 되면 탄착지점이 물에 잠길 우려가 있음.
- 또한 이 사격장 토양오염 연구조사결과(2008년 경원대 배범한 교수) 화약류와 중금속 물질이 주로 표토에 분포하고, 강수시 하천과 저질로 운반되는 것이 확인됐다고 나왔음.
- 사격장의 표토가 오염돼 비가오면 하천으로 유입되고 땀이 만수위시 탄착지점이 물에 잠기게 되면 수질의 오염이 심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우리나라에는 크고작은 사격장이 1200여개나 존재함.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군 장병들과 군부대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방부 차원에서 사격장 주변지역에 대한 철저한 환경오염 피해조사나 현황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또한, 군부대 토양·지하수 오염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유류에 의한 오염은 주로 지상 및 지하 유류탱크, 배관, 부수시설, 이들의 연결부위의 파괴에 의해 발생함
- ※ 지난 7월 17일 발생한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육군부대 기름 유출 사건도 사격장 관리 막사의 난방용 기름 탱크와 연결된 호스가 파손돼 일어났음.
- 유류로 인한 토양·지하수 오염의 경우, 즉각적인 정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오염 확산에 따른 정화비용이 크게 증가함.
- ※ 원주000유류중대의 경우, 최초 발견 당시 조사 이후 7년 동안 정화사업을 실시하지 않아 약 10배 가량의 정화비용이 증가하였음.
- 군에서 발생한 대규모 오염사고의 경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정화사업을 실시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토양·지하수 오염 특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오염원이 확산되기 때문에 오염즉시 정화를 실시해야함.
- 오염사고 발견에 대비한 예산을 따로 편성해 긴급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 한국형공격헬기사업(KAH) 어떻게 할 것인가>

- 군은 최초 중·대형급 한국형공격헬기(KAH)의 개발을 희망하였으나 '05년 1월 제정된 NSC 지침에 의거 사업 착수가 계속 지연되었음.
- ※ NSC지침 : 기동형헬기(수리온)를 우선개발 후 성공시점에서 공격헬기 개발 검토
- 2008년 4월: 미측에서 중고아파치 판매를 제안. 군에서는 중고아파치 도입을 적극 추진함.
- 2008년 10월: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중고아파치의 효율성이 논란이 되었으며, 운용유지비용 과다(연간 약800억원 정도예상) 등의 이유로 한국형공격헬기 개발을 촉구
- 국방위원회에서는 기재부에서 삭감한 한국형공격헬기예산을 다시 의결하여 올렸으나 예결위원회에서 또다시 삭감됨.
- 이후 육군에서는 AH-X 사업(대형공격헬기도입사업, 중고아파치 예상)과 KAH사업을 소형급으로 낮춰 동시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함.(High-Low Mix 개념)
- 방위사업청 청장은 2009년 3월 이명박 대통령에게 공격헬기 획득과 관련해 AH-X사업과 KAH사업을 소형급으로 낮춰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
- ※ 중·대형 한국형공격헬기 개발 9조원 → 5조원(중고아파치 구입+소형 한국형 공격헬기 개발)
- 장관께서는 합참의장 재직시 중고아파치 도입을 위한 AH-X 사업의 소요결정을 주도하면서 실무차원의 주요 검토회의(합동전략 실무회의, 합동전략회의)를 생략하고 서둘러 합동참모회의를 개최하여 의결하였음.
- 중고아파치 도입사업은 지금 당장 급할 것이 없는데 주요회의를 생략하고 급하게 진행한 이유가 무엇인가?
- 군사적 소요를 판단한 게 아니라 중고아파치를 싸게 팔겠다는 미측의 제의에 따라 사업을 급하게 진행한 것 아닌가?

- 지금 현재 우리 군은 AH-X사업과 KAH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음. 지난 3월 방위사업청장이 이명박 대통령께도 두가지 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 한 것으로 알고 있음.
- 대통령께 보고한 이후 지난 4월 중고아파치에 대한 방사청의 문의에 미측으로부터 받은 답변이 우리 정부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내용과 달라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
- 그 내용이 중고 아파치 도입 결정을 번복(이상희 前 장관 지시)할 정도로 결정적인 사항인가?
- 또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미측이 지난 8월경 항의서항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음. 사실인가? 항의 서항의 내용과 우리측의 의견은 무엇인가?
- 우리 군은 아직도 중고아파치 도입과 한국형공격헬기개발사업 중 어떤 것으로 가야할지 방향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음.
- 중고아파치 도입에 문제가 생겼다면 지금이라도 최초의 계획대로 중 · 한국형공격헬기 개발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함.